

| 이슈페이퍼 2022-07 |

동아시아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 비교 - 한·중·일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

도남희

1. 한·중·일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배경과 문제점
2. 한·중·일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정책 인식
3. 한·중·일 국가의 육아 환경 정책 제언
4. 한·중·일 국가의 육아 환경 변화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동아시아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 비교* - 한·중·일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

도남희 연구위원

◆◆ 요약 ◆◆

-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세 국가의 제도 구비, 이용 및 개선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 한국의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의 이용률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많음.
- 현행 법정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을 위해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를 중소기업 사업장으로의 이용 확대 등 사각지역의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함.
- 중국은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뚜렷한 구분이 없고 출산과 육아보장 대상과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육아정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출산지원 제도의 높은 이용률에 비해 제도 관련 정책 이해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제도임. 또한 법정 육아휴직이 보완도 시급히 필요한 부분임.
- 일본 정부는 일과 육아 양립 지원 및 여성 활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율 개선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대기업 중심의 제도 사용이 많음.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고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음.
- 공동 양육을 위한 일과 육아 양립 지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기업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는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직장 및 사회의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후 그들의 자녀관과 양육신념에 부응하는 정책 보완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0년 기본과제 「동아시아(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도남희·이정원·김지수·김명중·김병철·소마나오코·야오젠핑, 2020)」를 기반으로 작성됨

1

한·중·일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배경과 문제점

가. 가. 한·중·일 국가 관련 주요 정책

-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기반으로 세 국가의 제도 구비, 이용 및 개선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 ◆ 한국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관련 기본계획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있음.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21~2025)(관계부처 합동, 2020)”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제6차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7~2022)(관계부처 합동, 2017)”도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거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성평등한 육아 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 중국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환경 관련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여성권익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중국여성발전요강, 중국아동발전요강 등의 법을 근거로 남녀평등과 아동을 우선 보호하고자 함.
 - ◆ 일본의 직장과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 현장’ 및 ‘일과 생활의 조화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을 발표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를 기업에 실천을 장려 하여 왔음. 최근에는 ‘여성활약추진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시행하였음.
- 직장과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관련 정책과 법은 명칭과 내용은 다르지만, 직장과 사회에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 한·중·일 국가 주요 정책의 문제점

- 국기별로 직장과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관련 정책과 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한계도 있음.
 - ◆ 임신·출산기와 양육기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 대규모 기업에서 이용률은 꽤 높은 편이지만, 전체 사업장에서 이용률이 높지는 않고 유연근로제

의 활용실적이 그리 높지 않음.

- ◆ 중국은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뚜렷한 구분이 없고 육아 시간보장 관련 뚜렷한 지원이 없어 출산과 육아보장 대상과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육아정책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 일본의 육아휴직은 여성의 육아휴직률은 높은 편이나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고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육아휴직법에 따른 규정 마련이 어렵고 실질적 지원이 미흡함. 유연근무제도 역시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추세 속에, 영아보육에 대한 보육 지원요구가 많음.

2

한·중·일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정책 인식

- 2절의 한중일 국가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실시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함.
- ◆ 조사 대상은 한국의 전문가 21명, 중국의 전문가 26명, 일본의 전문가 21명임.
 -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학계 종사자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은 NGO/NPO 종사자가 많았음.
- ◆ 조사 내용은 임신·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에 대한 내용을 설문지로 작성하고 각 나라별로 번역을 실시한 후 다시 역번역 후 의미가 같은 지를 교차 체크한 후 실시함.

〈표 1〉 임신·출산기 지원제도의 구비 정도

구분	한국(N=21)	중국(N=26)	일본(N=21)
성별			
남	71.4	69.2	33.3
여	28.6	30.8	66.7
분야			
학계	61.9	50.0	61.9

구분	한국(N=21)	중국(N=26)	일본(N=21)
공무원	4.8	3.8	-
NGO/NPO	9.5	26.9	23.8
미디어 관련	4.8	-	4.8
기타	14.3	19.2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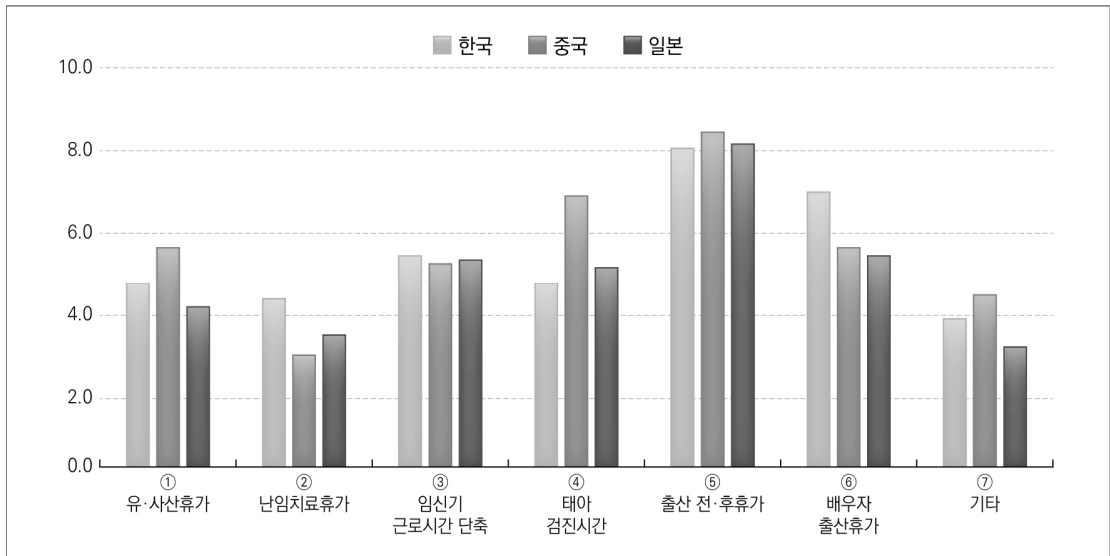
가. 직장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 임신·출산기의 제도 관련 인식과 요구

- ◆ 전문가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제도의 구비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 중국과 일본 모두 출산전후휴가가 가장 구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한국과 일본은 두 번째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잘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은 태아검진시간이라고 응답함.

[그림 1] 임신·출산기 지원제도의 구비 정도

단위: 점, 명



주: 1) 10점 척도의 평균값임.

2) 유·사산 휴가는 유산과 사산 주수에 따라 5일~90일까지 휴가를 차등부여하는 제도임.

3)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부여함(연간 3일).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을 앞 둔 임신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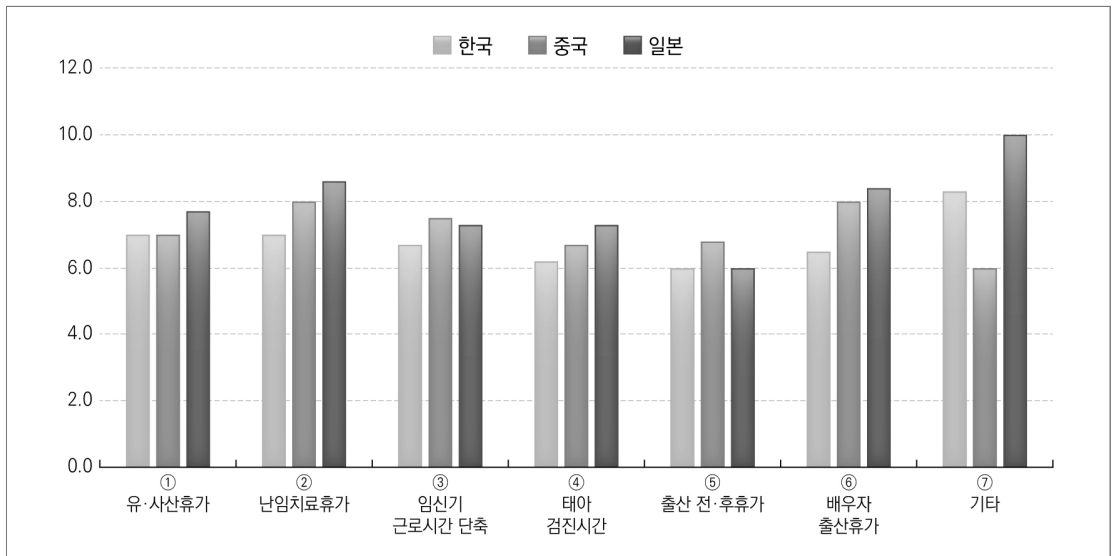
5) 태아검진시간은 임신7개월까지는 2개월 마다 1회, 임신 8~9개월은 1개월마다 1회, 임신 10개월 이후는 2주마다 1회 검진 시간을 허용하는 제도임.

- 6) 출산전·후휴가는 산전, 산후로 90일간 가능하며 산후에 45일 이상 배정되어야 함.
 7)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 시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함.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 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35, <표 IV-1-3>, p. 154, <표 IV-2-3> p. 173, <표 IV-3-3> 발췌·수정함.

- ◆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한국은 유·사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중국과 일본은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하였음.

[그림 2]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단위: 점, 명



주: 1) 10점 척도의 평균값임.

2) 기타 값의 내용은 한국은 임신기 지지기반 관련 등, 일본은 출산 전후 케어 관련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37, <표 IV-1-4>, p. 155, <표 IV-2-4> p. 174, <표 IV-3-6> 발췌·수정함.

- ◆ 이러한 각각의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한 가지 제도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배우자출산 휴가’로 한국은 28.6%, 중국은 32.0%, 일본은 42.1%로 응답하였음.

〈표 2〉 가장 개선이 필요한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1순위	수	1순위	수	1순위	수
① 유·사산 휴가	14.3	3	4.0	1	-	-
② 난임치료휴가	9.5	2	8.0	2	15.8	3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9.0	4	20.0	5	15.8	3
④ 태아검진시간	9.5	2	12.0	3	5.3	1
⑤ 출산전·후휴가	14.3	3	24.0	6	15.8	3
⑥ 배우자출산휴가	28.6	6	32.0	8	42.1	8
⑦ 기타	4.8	1	-	-	5.3	1

주: 1) 1순위에서 3순위를 응답했으나 1순위 값만 인용하여 응답수가 많지 않음.

2) 기타 내용은 한국 관련 규정 수립 및 준수, 일본은 출산 전후 케어 관련, 중국 조사는 기타내용이 조사되지 않았음.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37, 〈표 IV-1-7〉, p. 156, 〈표 IV-2-7〉 p. 175, 〈표 IV-3-7〉 발췌·수정함.

- ◆ 임신·출산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9%, 중국은 이용 기간이라는 응답이 64.0%,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8%로 가장 많았음.

〈표 3〉 임신·출산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① 이용기간	14.3	3	64.0	16	12.5	2
② 비용지원	4.8	1	12.0	3	18.8	3
③ 사용대상	14.3	3	16.0	4	6.3	1
④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61.9	13	8.0	2	43.8	7
⑤ 기타	4.8	1	-	-	18.8	3

주: 1) 소수 첫째자리로 맞춰 결과치를 제시하여 백분율 합계 ±0.1~0.2% 오차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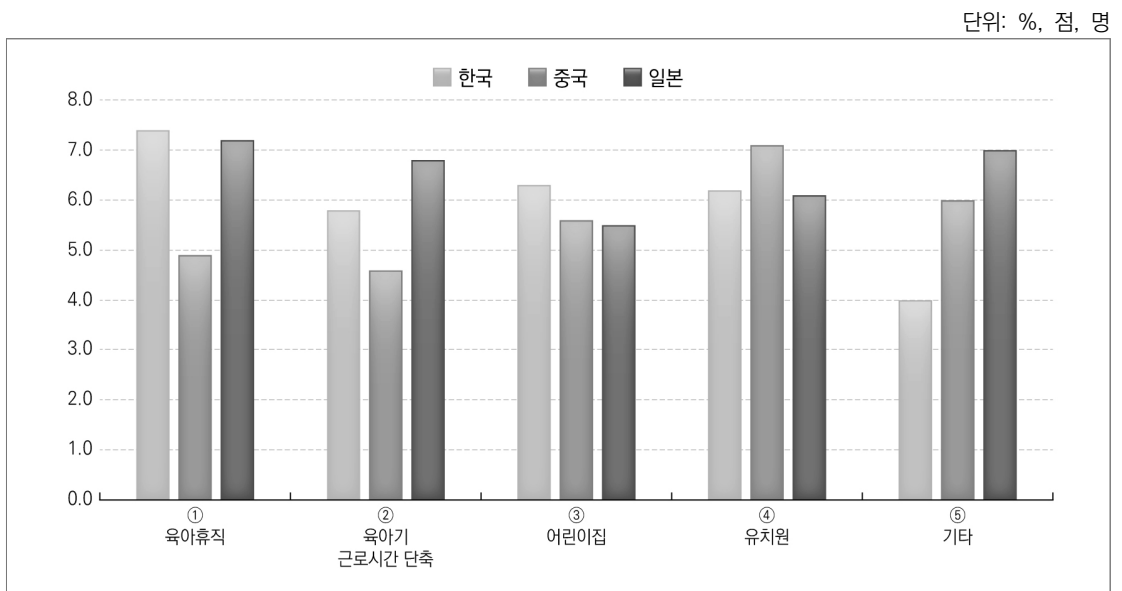
2) 기타 내용은 한국은 가족친화와 부부동시 육아휴직 등 내용으로 적절치 않으며, 일본은 태아 검진, 출산휴가 신설, 남성 휴가 이용 의무화 등, 중국 조사에는 기타내용이 조사되지 않았음.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38, 〈표 IV-1-8〉, p. 157, 〈표 IV-2-8〉 p. 176, 〈표 IV-3-8〉 발췌·수정함.

■ 육아지원제도 관련 인식과 요구

-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육아기 제도 구비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육아휴직 제도가 제일 구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은 유치원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함. 중국과 한국은 두 번째로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함.

[그림 3] 육아기 지원 제도의 구비 정도



주: 1) 기타 값의 경우는 모두 응답하지 않아 전체 응답자보다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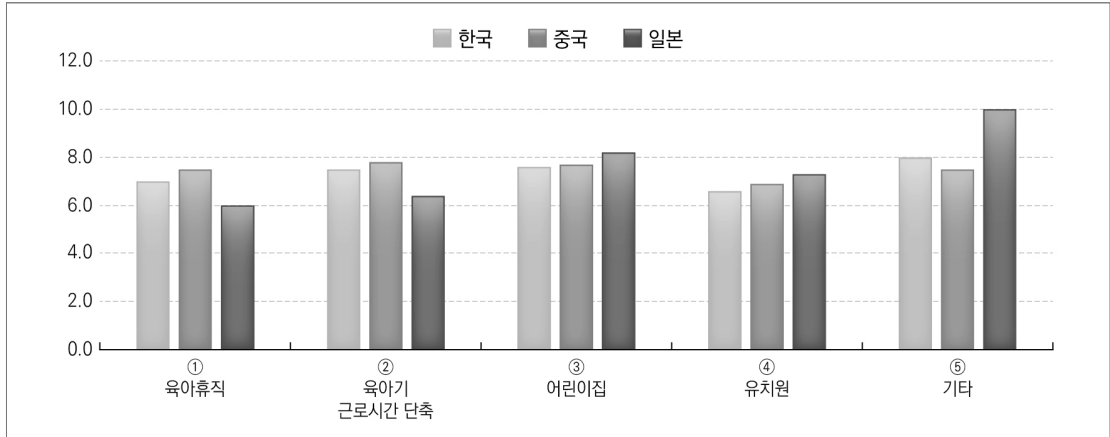
2) 기타 내용은 한국의 경우 가족친화제도, 부부동시 육아휴직, 일본은 육아광장 등.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39, <표 IV-1-10>, p. 157, <표 IV-2-10>, p. 176, <표 IV-3-10> 발췌·수정함.

- ◆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중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두 번째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한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국은 어린이집, 일본은 유치원 관련 개선이었음.

[그림 4]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단위: %, 점, 명



주: 1) 기타 내용은 한국은 가족친화제도, 부부동시 육아휴직, 일본은 사립보육시설인가 등.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1, <표 IV-1-13>, p. 159, <표 IV-2-13>, p. 178, <표 IV-3-13> 발췌·수정함.

- ◆ 육아지원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한 가지 제도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한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42.9%, 중국은 육아휴직 제도 36.0%, 일본은 어린이집에 관련 개선이 73.7%로 가장 많았음.

〈표 4〉 가장 개선이 필요한 육아기 지원 제도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1순위	수	1순위	수	1순위	수
① 육아휴직	28.6	6	36.0	9	5.3	1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2.9	9	24.0	6	10.5	2
③ 어린이집(직장·국공립)	19.0	4	28.0	7	73.7	14
④ 유치원	9.5	2	8.0	2	5.3	1
⑤ 기타	-	-	-	-	5.3	1

주: 기타 내용은 일본의 출산 전후 케어 관련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1, <표 IV-1-14>, p. 160, <표 IV-2-14>, p. 178, <표 IV-3-14> 발췌·수정함.

- ◆ 육아기 지원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한국의 경우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28.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국은 이용 기간(28.0%)에 대한 개선, 일본은 기타(65.0%) 내용이 많았음.

〈표 5〉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① 이용기간	19.0	4	28.0	7	5.0	1
② 비용지원	4.8	1	20.0	5	10.0	2
③ 사용대상	14.3	3	24.0	6	15.0	3
④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28.6	6	20.0	5	5.0	1
⑤ 기타	33.3	7	8.0	2	65.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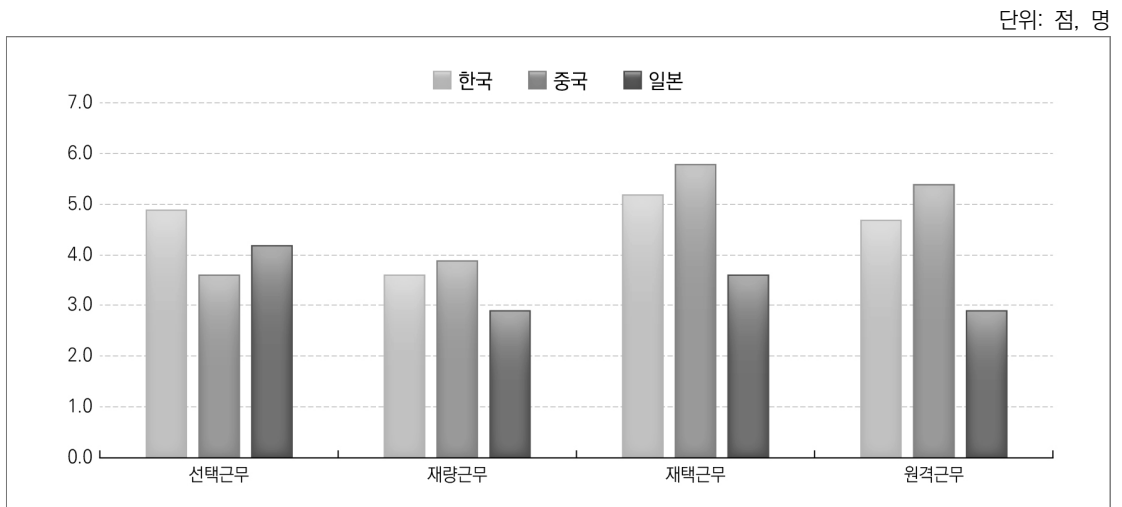
주: 기타 내용은 한국의 경우 취업자녀 중심 프로그램 운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강화, 직장 내 관련 제도 규정 수입 및 준수 여부 등이며 일본은 보육의 질 제고, 대기 아동 문제 등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1, 〈표 IV-1-15〉 p. 160, 〈표 IV-2-15〉, p. 179, 〈표 IV-3-15〉 발췌·수정함.

■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요구

-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의 구비 정도를 확인한 결과, 유연근무제 중 한국과 중국은 재택근무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본은 선택근무제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함.

[그림 5] 유연근무제의 구비 정도



- 주: 1) 선택근무는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임.
- 2) 재량근무는 업무 특성에 의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3)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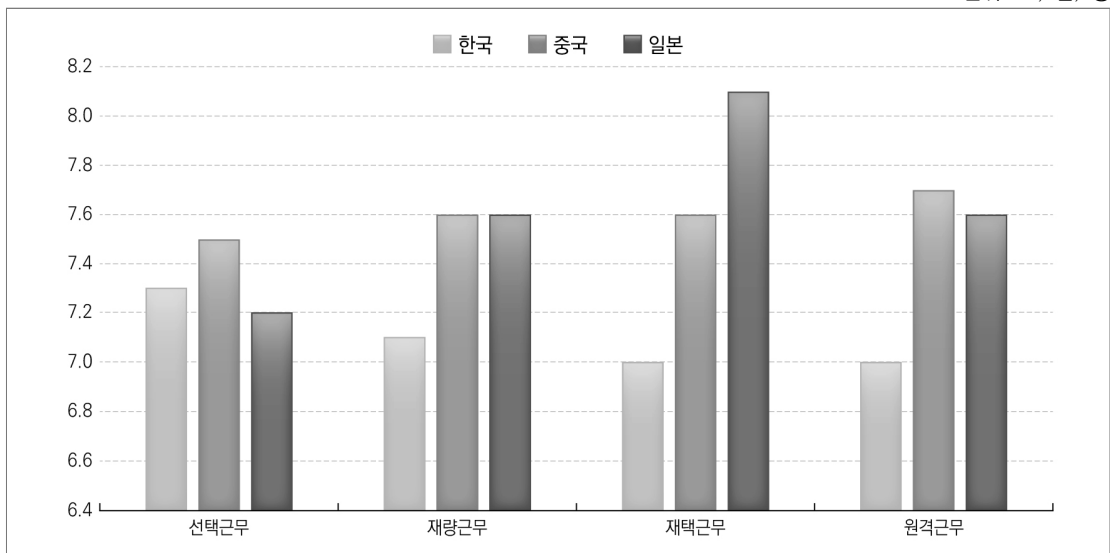
4) 원격근무는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3, <표 IV-1-17>, p. 161, <표 IV-2-17>, p. 180, <표 IV-3-17> 발췌·수정함.

- ◆ 유연근무제 개선 필요 정도가 가장 많은 제도는 한국은 선택 근무, 중국은 원격근무, 일본은 재택 근무로 나타남.

[그림 6] 유연근무제의 개선 필요 정도

단위: %, 점, 명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4, <표 IV-1-20>, p. 163, <표 IV-2-20>, p. 181, <표 IV-3-20> 발췌·수정함.

- ◆ 유연근무제 중 가장 개선이 요구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한국은 선택근무와 원격근무가 동일하게 28.6%로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재택근무 23.8%였고, 중국은 선택근무 30.4%, 재량근무 26.1% 순이었고 일본은 재택근무 47.4%, 재량근무 21.0% 였음.

〈표 6〉 가장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1순위	수	1순위	수	1순위	수
① 선택근무	28.6	6	30.4	7	15.7	3
② 재량근무	19.0	4	26.1	6	21.0	4
③ 재택근무	23.8	5	21.7	5	47.4	9
④ 원격근무	28.6	6	21.7	5	10.5	2
⑤ 기타	-	-	-	-	5.2	1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4, 〈표 IV-1-21〉, p. 163, 〈표 IV-2-21〉, p. 182, 〈표 IV-3-21〉 발췌·수정함.

- ◆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한 결과, 한국은 사용 대상의 확대가 많았고, 중국은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용 대상의 확대와 기타 내용에 해당하는 공적 보육, 보육의 질과 양적 확대 등이 주요 개선 내용이었음.

〈표 7〉 유연근무제의 개선 필요 내용

단위: %, 명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① 이용기간	9.5	2	26.1	6	-	-
② 비용지원	9.5	2	4.3	1	-	-
③ 사용대상	61.9	13	26.1	6	31.6	6
④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19.0	4	43.5	10	21.0	4
⑤ 기타	-	-	-	-	47.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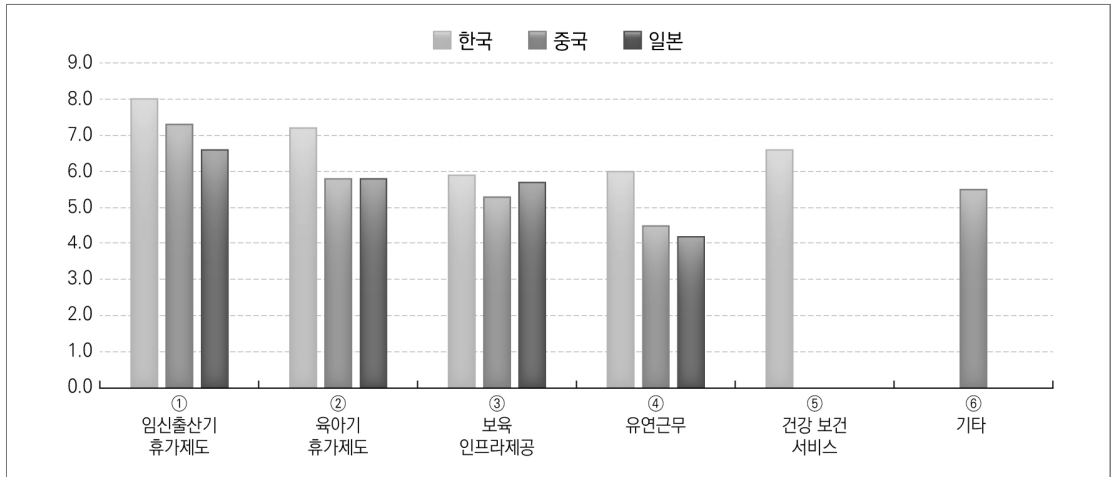
주: 일본의 기타 내용은 공적 보육 보장, 보육의 질 제고와 양적 확대, 기업 내 근로자 권리 보호, 재택근무의 관리 시스템화 등이 제시되었음.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5, 〈표 IV-1-22〉, p. 163, 〈표 IV-2-22〉, p. 182, 〈표 IV-3-22〉 발췌·수정함.

- ◆ 한편 직장의 육아환경 지원 제도의 자유로운 이용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 중국과 일본 모두 임신·출산기 휴가휴직제도에 높은 점수를 주어 비교적 이용이 가능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음. 한편 한국은 보육인프라 제공, 중국과 일본은 유연근무제 이용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함.

[그림 7] 직장의 육아환경 지원 제도의 자유로운 이용 정도

단위: %,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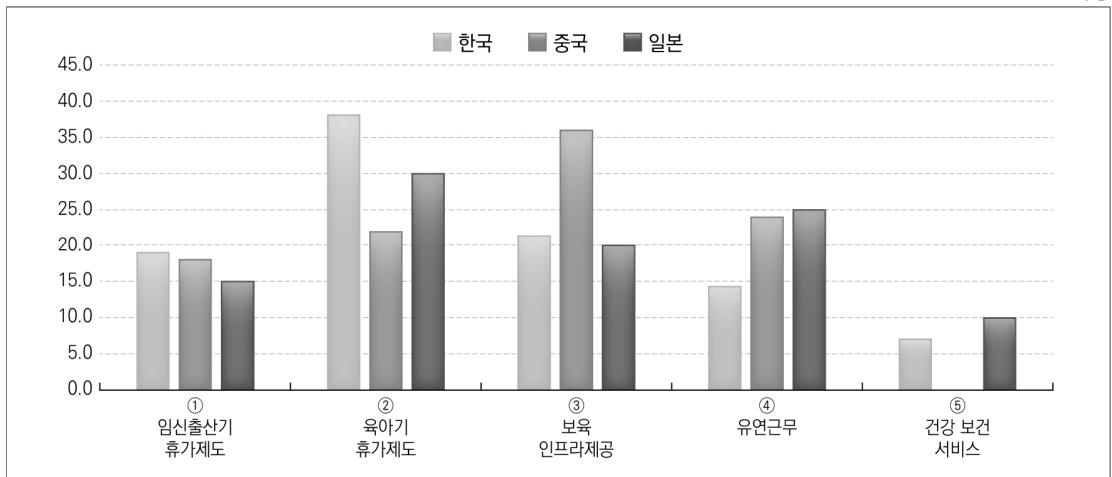
주: 중국은 ⑤ 건강보건 서비스에 대한 응답이 없었고 기타 값에 응답함.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5, <표 IV-1-23>, p. 164, <표 IV-2-23>, p. 182, <표 IV-3-23> 발췌·수정함.

- ◆ 저출산 극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 한국은 육아기 휴가휴직제도(38.1%)였고, 중국은 보육인프라 제공(36.0%), 일본은 육아기 휴가휴직제도(30.0%)라고 응답함.

[그림 8] 저출산 극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중복응답)

단위: %,명



주: 중국은 ⑤ 건강보건 서비스에 대한 응답 없었음.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6, <표 IV-1-24>, p. 164, <표 IV-2-24>, p. 183, <표 IV-3-24> 발췌·수정함.

나. 사회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 가족친화제도 실시 여부와 내용

- ◆ 한·중·일의 가족친화제도의 실시 여부를 확인함. 가족친화제도를 잘 실행하고 있는 비율로 볼 때 한국이 71.4%, 일본이 66.7%, 중국은 46.2%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이 가족친화제도를 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은 법령 제정과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도 관련 법령 제정, 프로그램 실시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본은 컨설팅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함.

〈표 8〉 가족친화제도의 실시 여부와 내용(중복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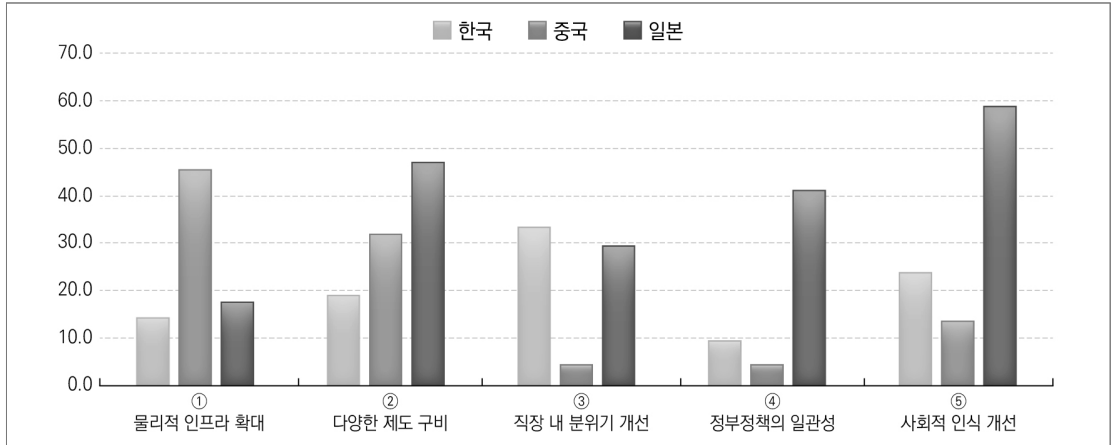
구분	실시 여부		가족친화제도 내용					
	아니오	예	관련법령 제정	교육프로그램 실시	컨설팅 제공	기업인센티브 제공	모니터링 실시	기타
한국	28.6	71.4	37.1	14.3	11.4	20.0	11.4	5.7
중국	53.8	46.2	38.1	19.0	19.0	14.3	4.8	4.8
일본	33.3	66.7	27.8	22.2	50.0	27.8	22.2	-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6, 〈표 IV-1-25〉, p. 165, 〈표 IV-2-25〉, p. 183, 〈표 IV-3-25〉 발췌·수정함.

- ◆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노력이 필요한 측면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직장 내 분위기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 중국은 물리적 인프라 확대와 다양한 제도 구비, 일본은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더 필요한 노력으로 보았음.

[그림 9]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에 대한 노력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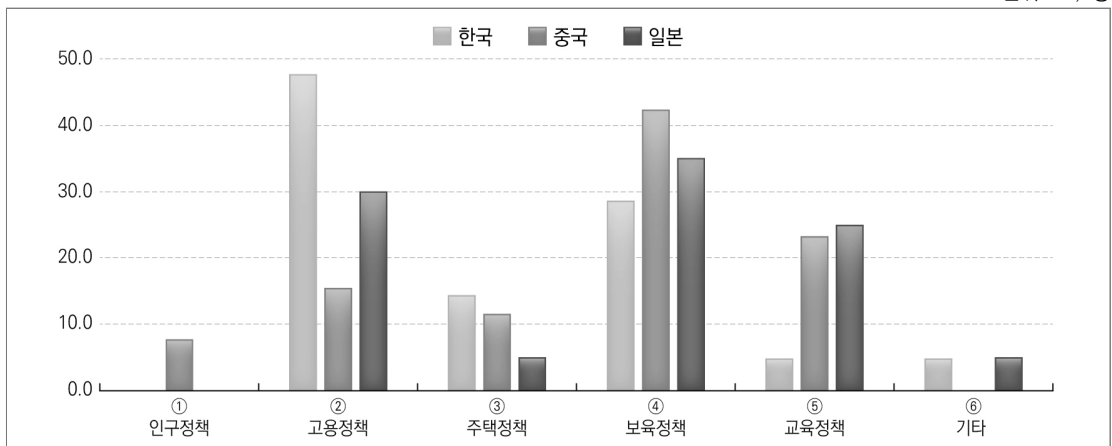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7, <표 IV-1-25-1>, p. 166, <표 IV-2-25-1>, p. 184, <표 IV-3-25-1> 발췌·수정함.

■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 제도 및 가치

- ◆ 사회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질문한 결과, 한국은 고용정책, 중국과 일본은 보육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함.
- 1순위로 응답한 내용 중 두 번째 응답은 한국은 보육정책, 중국은 교육정책, 일본은 고용정책이었음.

[그림 10] 사회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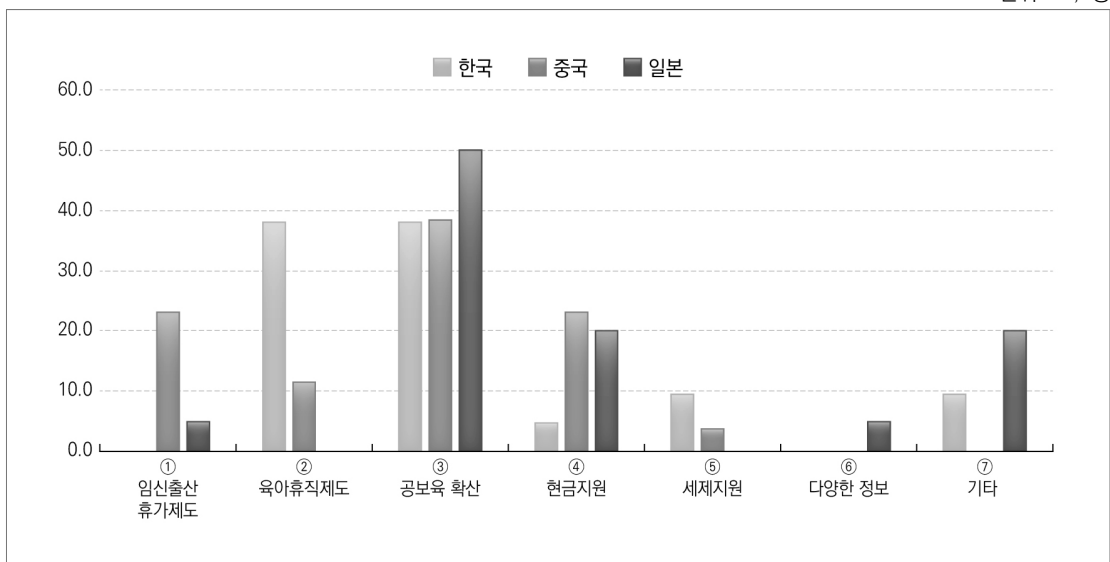
주: 일본의 기타 내용은 경제 정책 마련, 교통 정책, 마을 만들기 등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49, <표 IV-1-29>, p. 168, <표 IV-2-29>, p. 186, <표 IV-3-29> 발췌·수정함.

-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은 육아휴직제도와 공보육확산을 주요 추진제도로 응답하였고 중국은 공보육 확산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제도로 그 다음은 임신출산휴가제도와 현금지원이 추진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본은 공보육확산을 우선 추진과제로 그 다음은 현금지원 제도를 응답함.

[그림 11] 사회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1순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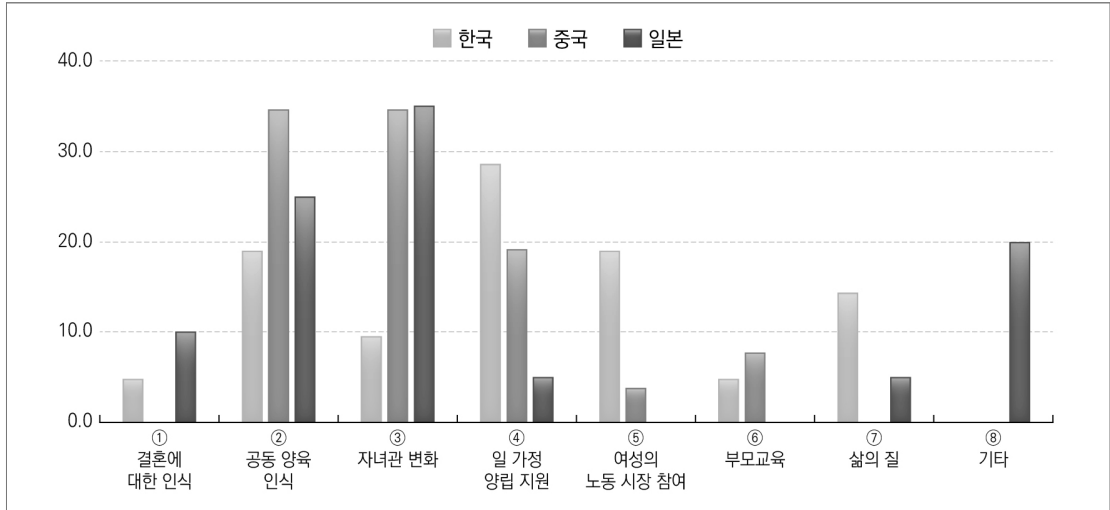
주: 일본의 기타 내용은 근로방식 개혁, 어린이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 등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50, <표 IV-1-30>, p. 169, <표 IV-2-30>, p. 187, <표 IV-3-30> 발췌·수정함.

- ◆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확인함. 한국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공동 양육 인식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였음.
- ◆ 중국은 공동 양육 인식과 자녀관 변화¹⁾가 중요 사회적 가치로 응답되었고 그 다음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었음.
- ◆ 일본은 자녀관 변화가 우선적인 중요 가치였고, 그 다음이 공동 양육 인식이었음.

1) 1가구 1자녀 정책이 실시된 후인 1980년 이후 출생한 중국의 외동 아들과 딸들은 '소황제'로 불리며 모든 가족의 관심아래 풍요로운 물질과 자유로운 정신을 소유하여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하여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힘들어 함.

[그림 12]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

단위: %, 명



주: 일본의 기타 내용은 경제 성장, 젠더불평등, 다양성 수용, 장시간 노동 문제 등임.

자료: 도남희 외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p. 151, 〈표 IV-1-31〉, p. 170, 〈표 IV-2-31〉, p. 188, 〈표 IV-3-31〉 발췌·수정함.

3

한·중·일 국가의 육아 환경 정책 제언

가. 한국

- 한국은 계속되는 초저출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직장과 사회의 정책 변화가 요구됨.
 - ◆ 사업장에서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의 이용률은 기업 규모와 사내 분위기에 의해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업종과 규모에 따라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
 - ◆ 제도의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현장 적용에의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현재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도를 중소기업 사업장으로의 이용 확대 등 사각지역의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함

(이재희, 도남희, 엄지원, 2018).

- ◆ 출산휴가 관련 인식과 이용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은 성별이나 업종에 따른 편차가 나타나므로 필요에 따라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고 업종에 맞는 제도를 시행,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필요함. 조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사내 분위기에 의해 제도의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위기 개선도 필요함.
- ◆ 사회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공보육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볼 때 국민들이 주거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있는 공보육 시설의 확산과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 한국 사회의 저출산 심화와 결혼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크다고 볼 때 고용정책과 일 가정 양립 정책 지원에 대한 조화로운 정책의 실현이 필요한 시점임. 젊은 세대들을 위한 고용정책과 결혼관의 변화에 부합되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 현장에서 근로자의 복지와 양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중국

- 중국은 아직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의 인구 성장률에 비해 감소세에 있으며 이에 대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 2000년 이후 중국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및 학령 전 아동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나 일반 가정의 육아 문제는 국가로부터 지원보다는 여전히 사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음.
- ◆ 대다수 정부 조치들은 아동 돌봄 부족에 대한 보완적인 차원에 그쳤으며, 일반 가정의 육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대응은 부재함.
- ◆ 가정구조 변화, 경제전환, 인구고령화 심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및 직장의 육아정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 출산전후휴가와 산전 검사의 이용률은 높고 두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출산지원 제도의 높은 이용률에 비해 일부 근로자들은 관련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

거나 일이 바빠서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음. 특히 임신·출산기 제도의 개선 방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제도임.

- ◆ 육아지원 제도에 관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만 이에 대한 충족이 어려움.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는 많지 않음.
- ◆ 실제로 중국은 법정 육아휴직이 없으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임. 한편 대다수 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재택근무제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사회의 양육 환경에 있어 임신·출산기 휴가·휴직 제도와 보육 인프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사회의 양육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육아비용과 일-가정 양립 환경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 육아 지원 서비스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자녀양육 환경 조성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에서도 유연한 근무 시간 배정, 전문적인 보육, 양육, 영아 돌봄의 장소 및 시간 제공, 합리적인 휴식 시간 배정 등의 시행이 요구됨.

다. 일본

- 일본은 최근 저출산 기조를 벗어나 1.36(2019)대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의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 일본 정부는 일과 육아 양립 지원 및 여성 활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출산율 개선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왔음. 이전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일과 육아 양립지원 정책 및 기업 의식은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 육아에 대한 남녀 간의 역할 분담도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육소의 대기 아동은 아직도 약 1만 2천명에 달하고 있음.

■ 이에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 공동 양육을 위한 일과 육아 양립 지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여성이 아이를 낳아 안심하며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일본의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이 필요함.
- ◆ 직장의 보다 개선된 육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가 필요함. 코로나 19 이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을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시간의 적절한 활용에 따라 육아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을 인식함. 향후 일하는 방식의 선택지로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 또한 유연근무제의 다양한 형태의 적용이 필요함. 최근 재택근무 등의 원격 근무와 출장 등이 이전보다 보급되어 기업의 인사제도와 인재 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로자의 가족 형성 및 육아가 지금보다 쉬워져 출산율 개선에 효과가 기대됨.
- ◆ 지역 활성화와 출산율 개선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의 정책 실현이 필요함. 코로나 19의 감염 확대의 영향을 받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근로자의 지방 이주도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출산율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임.

4

한·중·일 국가의 육아 환경 변화에의 시사점

■ 한·중·일의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변화

- ◆ 한국은 초저출산의 기조 속에서 출산율을 회복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 기조를 살피면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은 두 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서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준비와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전망함.
- ◆ 최근 초저출산의 기저에는 결혼관의 변화, 나홀로 가구의 증가, 만혼, 출산 연령의

증가 등의 공통된 원인들이 있으나 어떠한 대응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저출산의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됨.

-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일본의 총괄 정책은 출산율 회복을 가져왔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과 육아부담을 완화하려는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통찰이 필요함.
- 한국은 초저출산 기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해당 세대의 요구를 통해 정책을 보다 정교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을 본보기로 향후 인구정책의 초점과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의 대응이 필요함.

- ◆ 각국의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직장과 사회의 문화가 변화가 필요하며 이후 그들의 자녀관과 양육신념에 부응하는 정책 보완이 필수적임.
- ◆ 한중일 세 국가는 임신 출산 관련 제도는 어느 정도 구비되었고 이용 가능하나 유연 근무제 이용과 사용 요구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 보임.
- ◆ 한국은 출산과 육아 관련 다양한 법정제도가 구비되어 활용도도 높으나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육아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함.
- ◆ 중국은 출산과 육아정책의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적으로 보육을 해결하고 있는 현 상황을 넘어서 보육인프라 특히, 공보육의 확충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육아 정책 체계의 구축의 필요함.
- ◆ 일본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육아휴직의 차이를 해소하도록 하며 대기 아동의 해소를 위한 공보육 확충이 필요함. 또한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I 참고 문헌 I

- 도남희, 이정원, 김지수, 김명중, 김병철, 소마나오키, 야오젠핑 (2020).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Ⅲ):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 문무경, 박상신, 김병철, 이연화(2018). 동아시아 국가(한중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I): 한·중·일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전략의 특징.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희, 도남희, 엄지원(2018).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관계부처 합동(2017).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
- 관계부처 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21~2025).